2026년 9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정원	9/6	[뉴스현장]'기후 보상 청구서' 내민 네팔…"지구적 위기 대가" [뉴스프라임]'말랑이·왁뿌볼' 만지며 놀았는데…유해물질 '범벅'	
안지연	9/13	[뉴스프라임]금융노조 '지방이전 반대' 총파업…공공기관 개혁 진통 [와이드08]초등 저학년 3시 하교에 엇갈린 반응…"돌봄 해법" vs "부담 가중"	
김경아	9/20	[뉴스1번지] 5명으로 줄어든 장관 후보자…이번 주 인사청문회 [뉴스19] "추석 물가 잡아라"…고깃값 여전히 불안	
김홍태	9/27	[뉴스잇] 정부, 석유최고가 또 동결…10차 최고가격제 실시 [뉴스01] 통일부 승인받아야 북한 물품 반입…현재 "합헌"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김정원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2025. 08. 21	-
활동	김경아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26. 02. 20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6 9/6(일)	김정원	'기후 보상 청구서' 내민 네팔…"지구적 위기 대가" 김지수 기자 입력 2026-09-02 13:40 네팔 대홍수로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팔 정부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기후 재난 보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확인된 사망자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지구적 위기의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인도를 지목해 기후 취약국에 보상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팔 재무부는 이미 국제사회에 기후 재난 보상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질 경우 남아시아 20억 명 이상의 식수와 수자원이 위협받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중국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네팔이 빙하 움직임과 수위 변화에 대한 조기 데이터를 거듭 요청했지만 중국 측 실무진은 확답을 미뤘습니다. 실제로 네팔 재난 당국이 대피 경보를 울린 것은 국경 범람 후 41분이나 지난 뒤였고, 이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보도는 네팔 대홍수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 불평등의 문제로 조명하고, 데이터 공유 부재가 피해를 키웠다는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문제	당일 네팔 정부의 주장은 주요 탄소배출국이 기후 취약국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대홍수의 위험과 강도를 증가시켰다”라는 명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보도 이상의 분석과 관련 취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언급하신 ‘국제적 합의 구조’ 역시도 과학적 입증과 그로인해 정확성이 담보돼야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글로벌 재난 보도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정면으로 다룬 시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네팔이 요구하는 기후 재난 보상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보상 요구가 정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이를 실현할 국제적 합의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다면 시청자들이 이번 요구의 의미와 한계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6 9/13(일)	안지연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에 엇갈린 반응…"돌봄 해법" vs "부담 가중" 송고2026-09-06 09:02 이재경 기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른 하교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지속적인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추진에 대한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하교 시간을 3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학생과 교사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업시간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저학년의 이른 하교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OECD 평균보다 짧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교육현장에서는 현재 수업시간도 저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돌봄 공백은 정규수업 확대가 아닌 별도의 돌봄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보도는 ‘3시 하교제'를 둘러싼 찬반 입장과 각각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정책의 직접 대상인 저학년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과 피로도, 학습 효과 등을 짚고, OECD 평균 수업시간과의 비교가 적절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이와 함께 보도에서는 수업시간을 늘리더라도 정규교육과 방과후 돌봄의 역할을 분리해 교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한편, 이른바 '3시 하교제'는 지난 2018년에도 추진됐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시간 확대를 둘러싼 논쟁에 주목했습니다. 수업시간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각각의 근거와 함께 전달해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돌봄 공백을 정규수업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정규교육과 방과후 돌봄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해, 수업시간 확대 여부를 넘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논의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하교 시간 연장의 직접적인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만큼 수업시간 확대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시간 연장이 학생의 집중력이나 피로도, 학습 등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짚고, 국가마다 교육과정과 돌봄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OECD 평균 수업시간과의 비교가 적절한지도 함께 살펴봤다면 정책을 판단하는데 더욱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6 9/20(일)	김경아	"추석 물가 잡아라"…고깃값 여전히 불안 김도헌 기자 입력 2026-09-13 21:06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물가 잡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올여름 폭염 탓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명절 밥상 물가의 명암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본 연합뉴스TV 보도, 함께	물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현상을 전하는 것에 더해 가격 폭등 이면과 할인 혜택이 일부에만 쏠리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시죠. 치솟은 고깃값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는 전통시장 시민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성수품 공급을 최대 3배 늘리고 9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할인에 나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를 통해 9월 내내 할인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알렸고 반짝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추석 전까지 매일 수급 점검과 물가 교란 행위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정부 발표를 단순히 받아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정세를 찾은 과일값과 달리 폭등한 축산물과 채솟값을 수치로 대비해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애호박 79%, 한우 안심 13.8%처럼 구체적인 상승률을 제시해 정보의 정확성과 체감도를 높였고 전통시장 시민들의 목소리와 장관의 설명을 나란히 배치해, 정책 의도와 실제 현장 사이의 온도 차를 균형 있게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예산 투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단 한 줄 멘트로 넘긴 점은 아쉬웠습니다. 축산물 가격 폭등 이면에는 가축 폐사뿐만 아니라 사료비 부담과 복잡한 다단계 유통 마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는 없었습니다. 또 정부의 할인 쿠폰 지원이 대형마트 위주로 쏠리면서 영세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소외되는 사각지대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임시방편식 재정 투입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유통 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시스템 혁신을 촉구하는 감시 저널리즘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2026 9/27(일)	김홍태	통일부 승인받아야 북한 물품 반입…헌재 "합헌" 송고2026-09-18 05:48 한채희 기자 지난 뉴스01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을 합헌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8명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내렸는데요, 지난 2018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물품 146점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진 씨는 남북 교역 대상이라는 이유로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진씨의 재판부는 헌재의 판단을 참고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4년째 결론이 나오지 않자 헌재에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기도 했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는 사실과 결정 시기, 재판관의 이에 대한 합헌 의견 재판관수 그리고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비교적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규 씨가 북한 물품을 반입한 경위와 통일부 승인 의무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경위를 함께 설명해 시청자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논거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이라도 있었다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더 명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북한 물품의 반입·반출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취지와 만약 승인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간단히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향후 북한 관련 물품 거래나 남북 교류 활동에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보도는 헌재 결정 사실과 사건의 경위를 시청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합헌 판단의 논거와 관련 조항의 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 보도에서는 결정문의 핵심 내용과 전문가 설명을 함께 전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짚어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헌재 결정문에 담긴 핵심 논리를 직접 인용하거나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이면 보도의 전문성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6. 09. 0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7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팔 정부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기후 재난 보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확인된 사망자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지구적 위기의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인도를 지목해 기후 취약국에 보상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팔 재무부는 이미 국제사회에 기후 재난 보상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질 경우 남아시아 20억 명 이상의 식수와 수자원이 위협받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중국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네팔이 빙하 움직임과 수위 변화에 대한 조기 데이터를 거듭 요청했지만 중국 측 실무진은 확답을 미뤘습니다. 실제로 네팔 재난 당국이 대피 경보를 울린 것은 국경 범람 후 41분이나 지난 뒤였고, 이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보도는 네팔 대홍수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 불평등의 문제로 조명하고, 데이터 공유 부재가 피해를 키웠다는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시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네팔이 요구하는 기후 재난 보상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보상 요구가 정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이를 실현할 국제적 합의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다면 시청자들이 이번 요구의 의미와 한계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말랑이와 왁뿌볼에서 안전 기준의 16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안전 인증 의무를 피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말랑이 표면에서 어린이제품 기준의 164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겉면을 깨뜨려 안의 점토를 만지며 노는 왁뿌볼에서도 3세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피부 자극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말랑이와 왁뿌볼 등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학생은 물론 미취학 아동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상당수 제품이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KC 인증 의무를 피하고 있습니다. KC 인증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편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유해물질이 확인된 제품을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어린이용 제품 구매 시 KC 인증과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보도는 인기 어린이 완구의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전달하고, 업체들이 KC 인증을 피하는 구조적 허점까지 보여줬습니다. 소비자 주의 당부와 함께 판매 차단 조치까지 담아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14세

이상으로 연령을 표시하면 KC 인증을 피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서울시의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면 보도가 더욱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의 5분의 1 수준인 파격적인 조건에 반도체 벨트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에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 임차 시 최대 3억 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사실상 파격적인 특혜 수준입니다. 업계는 이 제도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이 최대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미 동탄의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는 두 달여 만에 호가가 4억 원 넘게 오르는 등 반도체 벨트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1인당 평균 7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 기대감까지 더해져 통근 편의성이 좋은 지역의 집값 상승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 이후 이천 거주자들이 동탄·용인 등지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의 복지가 가계대출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다는 지적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삼성전자 사내 대출이 반도체 벨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현장 취재와 통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사례와 비교해 반도체 머니의 부동산 시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사내 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다는 지적이 언급됐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현행 규제 체계의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면 보도가 문제 제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번째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해마다 700억 원씩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우선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곳이 선정됐습니다. 당초 모든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의 연구·인재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3곳을 먼저 추렸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며 2030년까지 해마다 700억 원씩 예산이 투입됩니다. 부산대는 남부 해양 수도권 발전 전략과 맞물려 사업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높다는 점이, 전남대는 첨단 반도체·미래에너지·AI 특성화 계획이, 충남대는 중부권 메가프로젝트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기관 밀집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 차등 등 엄정한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선정 대학별 평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선정 기준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당초 구상에서 3개 대학으로 압축된 경위도 함께 담아 정책의 맥락을 잘 짚었습니다. 다만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거점국립대들에 대한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 방식이 오히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함께 담았다면 이번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논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미란 씨의 사인을 두고 경찰이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국수본부장이 뒤집는 혼선까지 빚어졌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 장미란 씨는 실종 신고 후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추정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목맴사 추정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도 부검 결과 시신 부패로 외상이나 질식은 논의하기 어렵지만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시신 부패로 사인은 불명"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국수본부장이 뒤집는 혼선이 빚어진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수본은 "목맴사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경찰 수뇌부 간의 엇갈린 발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혼선의 경위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입장이 바뀐 시점을 짚어 논란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한편 경찰의 잇따른 말 바꾸기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신뢰를 잃어가는 경찰의 대응이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다뤘다면 보도가 단순한 경위 전달을 넘어 경찰 수사의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조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의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에 경찰 자체 개혁위원회에 이어 여당과 총리실까지 앞다퉈 개혁 기구를 꾸리고 있습니다. 기구만 난립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은 요원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말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 이어, 한 달 만에 여당의 경찰개혁추진단과 총리실의 개혁 기구까지 잇달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주체가 경쟁적으로 개혁 기구를 꾸리고 있지만 각각의 역할과 관계는 아직 모호합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준비된 것도 없고 제대로 논의한 것도 없다"며 "회의 몇 바퀴 돌리다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후속 대책도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실종 사건 처리 대책은 기존 매뉴얼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고, 상피제 개선과 내부비리수사대 설치, 순환인사 확대 등도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겨 기구와 대책을 경쟁적으로 늘리기보다 실효성을 검증한 뒤 제도와 조직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보도는 경찰 개혁 논의가 기구 난립과 땜질식 대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내부 관계자 발언을 통해 날카롭게 보여줬습니다. 개혁의 방향성보다 속도에 급급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경찰 개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언이 보완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문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담았다면 보도가 경찰 개혁 논의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6. 09. 1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7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처럼 관련 기관과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금융노조 조합원의 총파업 집회 배경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공기업이 일단 제외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지방 이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대 국책은행 소속 금융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열린 대규모 총파업에서는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 금융당국과 기업, 은행 등이 모여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노조도 지방 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통폐합 방안을 둘러싼 우려도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용 절감이 개편의 목적은 아니며, 통폐합 과정에서도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신규 채용 규모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에 주목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서울에 모여 있어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전해 지방 이전을 우려하는 이유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전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설명도 함께 전하며 현재 정책 추진 상황과 이를 둘러싼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금융권이 지방 이전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전문가 분석을 덧붙였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업무 효율성과 금융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반대로 지방 이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도 함께 짚었다면 이를 둘러싼 쟁점을 보다 균형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른 하교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지속적인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추진에 대한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하교 시간을 3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학생과 교사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업시간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저학년의 이른 하교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OECD 평균보다 짧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수업시간도 저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돌봄 공백은 정규수업 확대가 아닌 별도의 돌봄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에서는 수업시간을 늘리더라도 정규교육과 방과후 돌봄의 역할을 분리해 교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한편, 이른바 '3시 하교제'는 지난 2018년에도 추진됐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시간 확대를 둘러싼 논쟁에 주목했습니다. 수업시간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각

각의 근거와 함께 전달해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돌봄 공백을 정규수업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정규교육과 방과후 돌봄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해, 수업시간 확대 여부를 넘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논의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하교 시간 연장의 직접적인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만큼 수업시간 확대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시간 연장이 학생의 집중력이나 피로도, 학습 등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짚고, 국가마다 교육과정과 돌봄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OECD 평균 수업시간과의 비교가 적절한지도 함께 살펴봤다면 정책을 판단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숏폼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짧고 빠르게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익숙해지고,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가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OECD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 변화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가 3년 전보다 14점 하락한 가운데, 수학과 과학에 비해 읽기 영역의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위 성취 수준의 학생은 줄고 최하위 수준의 학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는 읽기 점수 하락은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는데요, 그 배경으로 숏폼과 소셜미디어 이용 증가가 문해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점수 하락에도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1~9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학과 과학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컴퓨터 문제 해결력도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서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읽기 성취도 하락에 대응해 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정부의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저하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평균 점수의 하락만 전달하지 않고 성취 수준별 변화와 다른 국가의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학과 과학 등 다른 영역의 결과도 함께 비교해 읽기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덧붙여지지 않아 다소 아쉽습니다. 보도에서 읽기 능력 저하의 배경으로 숏폼과 소셜미디어 이용 증가를 언급한 만큼, 전문가를 통해 이러한 미디어 이용 방식이 실제 읽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였다면 조금 더 깊이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학생들의 읽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짚었다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저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다뤘습니다. 청주시 남이면에서는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수해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마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괴산군 소수면에서는 시설

건설에 앞서 주민과 사업자, 인허가 당국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에 합의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5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 적정성이 확보되면 주민 동의 없이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사례를 함께 보여줬습니다. 보도는 주민 동의가 법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발전시설이 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와 농촌 주민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지역과 협의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비교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배경까지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수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만큼,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전문가나 관련 자료를 통해 검증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생 사례로 제시한 지역은 주민과 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하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였습니다.

● 김경아 시청자평가원(26. 09. 2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7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경아입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후보자는 5명으로 줄었는데요. 대법관과 특별감찰관까지 포함해 이번 주에만 모두 7명의 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연합뉴스TV가 청문회 정국의 핵심 쟁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는 청문회 대상자가 총 7명으로 확정된 상황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용혜인 후보자의 자진사퇴 소식을 먼저 짚었구요. 월요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전대차 탈세와 증여 의혹 검증 일정을 전했습니다. 이어 15일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과 '판사 자녀 채용' 의혹을 짚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아파트 4개월 실거주 논란'과 이소영 중기부 후보자의 '갭투자·이해충돌 논란'도 다뤘습니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특공·편법 증여 의혹과 정책 검증을,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영끌 매수' 의혹을 전했고,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검증까지 주간 일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7명에 달하는 방대한 일정을 요일별, 후보자별 핵심 쟁점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복잡한 청문회 일정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개인 신상 의혹뿐만 아니라, 강신철 후보자의 '사관학교 통합'이나 '호르무즈 파병' 같은 굵직한 국방 안보 정책 쟁점을 함께 다뤄 정책 검증으로 영역을 넓힌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 없이 파행 운영된다는 정치권 상황을 짚어줘, 청문회의 한계를 미리 알 수 있게 한 점도 좋았습니다. 다만 의혹 키워드만 단순 나열하는 체크리스트식 브리핑에 머문 점은 아쉬웠습니다. 탈세나 특공, 갭투자 같은 의혹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또 장관직 수행에 어떤 이해충돌을 낳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야 공방을 중계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후보자들의 서면 답변 내용이나 반론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보는 균형 잡힌 분석도 부족했습니다. 공직 적격성을 더 입체적으로 짚어내는 심층 검증 저널리즘을 기대해 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물가 잡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올여름 폭염 탓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명절 밥상 물가의 명암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본 연합뉴스TV 보도, 함께 보시죠. 치솟은 고깃값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는 전통시장 시민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성수품 공급을 최대 3배 늘리고 9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할인에 나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를 통해 9월 내내 할인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알렸고 반짝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추석 전까지 매일 수급 점검과 물가 교란 행위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정부 발표를 단순히 받아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정세를 찾은 과일값과 달리 폭등한 축산물과 채솟값을 수치로 대비해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애호박 79%, 한우 안심 13.8%처럼 구체적인 상승률을 제시해 정보의 정확성과 체감도를 높였고 전통시장 시민들의 목소리와 장관의 설명을 나란히 배치해, 정책 의도와 실제 현장 사이의 온도 차를 균형 있게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예산 투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단 한 줄 멘트로 넘긴 점은 아쉬웠습니다. 축산물 가격 폭등 이면에는 가축 폐사뿐만 아니라 사료비 부담과 복잡한 다단계 유통 마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는 없었습니다. 또 정부의 할인 쿠폰 지원이 대형마트 위주로 쏠리면서 영세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소외되는 사각지대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임시방편식 재정 투입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유통 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시스템 혁신을 촉구하는 감시 저널리즘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생태계의 파괴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야외 노동 현장을 위협하는 거대한 리스크인 동시에, '기후테크'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히며 글로벌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가 가져온 거대한 산업 전환의 명암을 연합뉴스TV 기획 코너 '프리즘'은 어떻게 조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폭염과 폭우로 채솟값이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는 시민 인터뷰로 문을 열었습니다. 1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현실을 보여준 뒤, 건설과 제조 현장의 조업 중단, 노동시간 단축, 포스코 침수 사례 등을 전하며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 실태를 짚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폭염으로 전 세계에서 5,690억 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이 사라졌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후가 상시 경영 리스크가 됐음을 강조하는 한편, 차열 기술과 침수 방지 시설, 스마트팜과 저전력 AI 등 '기후테크' 시장으로 투자가 몰리는 산업의 변화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본 보도는 기후변화를 환경이나 날씨 뉴스에 가두지 않고 산업과 노동, 시장 재편이라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풀어낸 점이 돋보였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전 세계 노동 손실률, 기업 피해 사례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단계별로 배치해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환경경제학 전문가의 식견을 적절히 더해 위기와 기회를 입체적으로 짚어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 잠재력만 강조했을 뿐, 우리 산업계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투자 유치 난항이나 규제 장벽, 정부 지원의 한계 같은 냉정한 현실 진단은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거나 위기에 놓인 영세 농가와 한계 노동자들을 위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그늘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이끌어내는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식 거래 인프라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저녁 8시까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애프터마켓'을 열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퇴근길 투자 길은 열렸지만 유동성 부족이나 전산 장애 같은 불안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제도 개편을 어떻게 짚어봤는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보도는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 출범 소식을 전합니다.

기존의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없애고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접속매매 방식을 도입한 점, 그리고 가격제한폭이 전일 종가 기준 ±30%로 확대된 점을 짚었습니다. 공시가 빠르게 반영되는 이점은 있지만,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왜곡과 전산 과부하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 경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끝으로 대체거래소와의 경쟁 속에서 더 유리한 곳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최선집행기준(SOR)을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본 보도는 복잡한 제도 변화를 그래픽과 알기 쉬운 설명으로 깔끔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복수 시장 체제에서 투자자 주문이 유리한 쪽으로 자동 배정되는 최선집행기준의 개념을 잘 설명해 시장 구조 개편의 맥락을 충실히 전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시간 연장의 편리함만 강조하지 않고, 거래량이 적

은 시간대에는 작은 전산 오류도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균형 있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쟁점인 'ETF와 ETN 제외'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ETF가 빠져 '반쪽짜리 거래'에 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비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거래소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나 호가 단위 차이 등 투자자가 체감할 실질적인 비교 분석도 아쉬웠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뇌동매매를 막을 안전장치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는 후속 취재가 반드시 뒤따라야겠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인류에게 통제하기 힘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일제히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었고, 오픈AI는 연내 상장 계획까지 미뤘는데요. AI 경쟁 이면에 불거진 안전성 논쟁을 다룬 연합뉴스TV의 보도 시각을 짚어봤습니다. 보도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밝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진화하는 이른바 '재귀적 자기개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외부 감시자 배치를 제안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등 대표적 AI 기업인들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올트먼 CEO는 연내 기업 공개를 전격 연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1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연구원의 퇴사 인터뷰와 함께, 미 정치권으로 번지는 속도 조절론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본 보도는 AI 업계의 최대 화두인 안전성 위기와 속도 조절 논쟁을 주요 기업 수장들의 실제 발언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재귀적 자기개선'이나 '외부 감시자 배치' 같은 어려운 기술 개념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냈구요. 오픈AI의 상장 보류처럼 실제 시장에 미친 파급 효과를 짚어 사안의 무게감을 잘 살렸습니다. 기술 낙관론에 치우치기 쉬운 IT 보도 속에서 전문가들의 경고를 균형 있게 다룬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빅테크 수장들의 발언 뒤에 숨은 전략적 셈법을 간과한 점은 아쉽습니다. 선도 기업들이 속도 조절과 규제를 외치는 배경에는, 후발 주자의 추격을 막고 독점력을 유지하려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흐름이 자체 AI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는 우리 기업과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외신을 단순 요약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글로벌 규제 담론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국내 산업의 길을 제시하는 심층적인 저널리즘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6. 09. 2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7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주 뉴스잇에서는 정부가 치솟는 국제유가에도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고 전했는데요,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유업계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는 국제유가를 면밀히 살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 한 번 동결했다고 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가격이 고정됨에 따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은 18일 0시부터 4주간 리터당 1,800원 아래 선에서 유지된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상황 속 소비자 물가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서민들의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전쟁 발발 이후 국내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는 다만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이 같은 최고가격제는 정유업계와 정부 모두에게 부담일 수 있다면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폭파와 홍해 지역의 수송 불안까지 겹치며 국제유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한 달 전만 해도 100달러 안팎이던 두바이유는 최근 127달러를 넘어섰고, 6개월 넘게 가격 통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장기화될수록 일단 세금이라는 측면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방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멘트도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손실보전에 대비한 예비비를 아직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라며 장기화에 따른 출구 전략을 모색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배경 속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한 사실과 휘발유·경유의 구체적인 가격, 적용기간을 제시해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정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동결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정유업계와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양쪽 측면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이 일반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인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정유업계에 어떤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수도 있기에, 이 부분 설명은 조금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가격 동결로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부담을 덜게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전달되고, 주유소 판매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표나 그래프로 제시하고,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재정과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선명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지난 뉴스01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을 합헌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8명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내렸는데요, 지난 2018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물품 146점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진 씨는 남북 교역 대상이라는 이유로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진씨의 재판부는 헌재의 판단을 참고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4년째 결론이 나오지 않자 헌재에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기도 했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는 사실과 결정 시기, 재판관의 이에 대한 합헌 의견 재판관수 그리고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비교적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규 씨가 북한 물품을 반입한 경위와 통일부 승인 의무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경위를 함께 설명해 시청자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논거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이라도 있었다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더 명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북한 물품의 반입·반출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취지와 만약 승인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간단히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향후 북한 관련 물품 거래나 남북 교류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짚어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헌재 결정문에 담긴 핵심 논리를 직접 인용하거나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이면 보도의 전문성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지난 와이드 08에서는 아이들 통학로에 자욱하게 깔린 담배 연기는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금연 구역 경계를 한 발짝 벗어난 골목은 사각지대라면서 스쿨존 안이라고 해도 사유지면 단속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현장에 나갔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 앞 통학로인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는 현장과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흡연자들이 무리지어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인근 주민은 담배 피우기 시작하면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여서 숨을 참으면서 일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골목은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사유지라서 단속이 어려운데요, 사각지대는 이뿐만이 아니어서, 바닥에 그어진 금연구역 경계선을 한 걸음만 벗어나면, 같은 통학로인데도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에 학교 주변 식당들도 곤욕인데요, 식당 앞에는 흡연을 삼가 달라는 안내문까지 붙었는데요, 관할 보건소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 단순 계도조치만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인 만큼,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를 현장 영상과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구역 경계선을 조금만 벗어나면 단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학교 인근 골목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은 시청자의 관심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와 흡연 장면, 식당의 금연 요청문 등을 함께 제시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주변 주민과 영업장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임을 보여준 점도 좋았습니다. 다만 어떤 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이 지정되는지 그리고 또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학교·지자체·보건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통학로의 금연 구역과 사유지 경계를 그래픽 등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다른 지역의 해결 사례나 지자체의 대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함께 시청자들에게도 금연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학로에서 자유롭게 흡연하기보다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이동 공간임을 배려하고, 문제 발생 시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에 신고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주 와이드 08에서는 교정시설은 재소자들에 대한 격리 기능 외에, 이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교화 기능도 맡고 있다고 전하면서, 최근에는 성범죄자나 스토킹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VR 기술을 활용한 '역지사지' 교육도 시작했다는데요, 이를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다고 전했습니다. 교정기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현실, VR 교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이제 우리는 그 일상으로 함께 걸어가보려 한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저항하던 피해자의 모습, 사건 이후 고통스럽게 변해버린 피해자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상반기 시험운용에 이어 지난 7월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VR 심리치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자가 범죄 상황을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VR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만들어진 상황이란 걸 알고 있는데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감정이 생생하게 와닿는다면서,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은 한 수형자는 교육을 받은 뒤 달라진 심경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 수형자는 여기서 시간만 때우다 사회에 나가면 되겠거니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했었는데…(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힘들어하고 벌벌 떨던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난다며, 마음이 아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상반기 9개 기관에서 수형자 3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운영을 한 결과, 피해자를 향한 공감능력 등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는데요, 특히 성폭력,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인지왜곡이나 공감능력 등 주요 평가지표는 기존 심리치료만 받은 이들에 비해 상승폭이 2배 넘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교정본부는 특히 '피해자 공감' 교육 구성에 공을 들였으며, 수형자들의 재범을 막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데요, 교정본부는 VR 교육을 받은 수형자들의 재복역률을 3년간 살펴본 뒤, 운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교정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수용과 격리에 그치지 않고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한 교화와 심리치료의 관점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가 직접 VR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수형자의 실제 반응과 소감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시청자가 교육의 내용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3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와 기존 심리치료와의 차이를 제시해 단순한 체험담에 머물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함께 전달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평가지표의 상승'이 실제 재범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범운영의 평가 방법과 비교 대상, 조사 기간, 통계적 의미 등을 설명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과의 장기적인 재범률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앞으로 보강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VR 교육의 운영 방식, 교육 대상 선정 기준, 기존 심리치료와의 차이 등에 대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고, 이로 인한 변화를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VR 교육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인 반응만으로 효과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재범률 감소와 사회 복귀라는 장기적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마무리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9월 6일 04시/ 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9월 13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9월 20일 04시/ 김경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9월 27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